

동해북부선 연결 예타조사 없이 추진 공기도 크게 단축

남북경협 SOC사업

SOC사업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최우선 과제로 확정되면서 도내 건설·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2007년 합의된) 10·4 선언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건설협회 북한 SOC 연구용역 추진**=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9일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회담으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 남북 경협, 통일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건설통일포럼을 출범시킨다. 도회는 내달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관하는 건설정책포럼에서 북한 SOC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북한의 도로·주택 등 인프라 현황부터 파악하고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마땅한 SOC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SOC사업'은 대형 호재로 꼽힌다. 오인철 회장은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당장 추진이 어려워도 하루빨리 실질적 계획이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며 "동해북부선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도내 건설업계들의 북한 진출 기회가 열릴 것 기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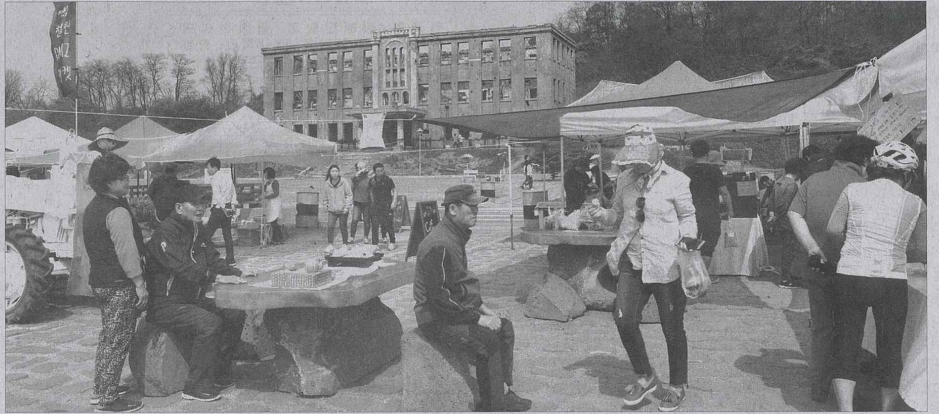
북 인프라시장 진출 대형호재
도건설협 개발 연구용역 나서

도·정부 철도 개설 방안 합의
동해선 국가정책사업 청신호

■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국가 정책사업 청신호=동해북부선 철도의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관련불이 들어왔다. 동해북부선은 강릉-고성 제진 104.6km 구간을 연결하는 북한 경제시대 핵심 교통망이다. 하지만 수요를 산정할 수 없어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 관련 성과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제성과 무관하게 동해선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경제성에 변변히 발목을 잡힌 도로서는 큰 속도를 해결한 셈이다. 2조3,49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은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등 3년이 소요되지만 동시 추진 시 2년이면 마칠 수 있다. 공사기간 5년을 고려하면 완공까지 7년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남북 정상이 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개선에 설립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도 인원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현·신하림·윤종현기자



DMZ 앞에서 열린 프리마켓 4·27 판문점 선언 후 첫 주말인 29일 철원 노동당사에서 DMZ 프리마켓이 열려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있다. 촬영=김남덕기자

접경지 부동산 들쭉... 인제 땅값 한달새 2배 올랐다

올 1분기 도내 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평균 지가 상승률은 0.85%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0.83%)보다 0.02% 올라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남(0.92%)에 이어 가장 높았다.

특히 속초·고성지역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시기 속초·고성

3.3㎡당 7만원 → 15만원 돌파
실질적 규제완화시 폭등 예측

지가는 각각 1.57%, 1.21% 올랐다. 속초지역은 상권이 밀집돼 있는 중앙동 재개발 사업과 속초항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됐다. 또 해안가 주거용 토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성은 인접지역 교통망 확대·귀농 증가에 따른 주거시설

투자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도내 접경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향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매물 거래 계약 시기를 미루거나 내놓은 물량을 회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회담을 앞둔 지난달 중순 총 4건의 토지 거래가 무산됐다.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매도자들이 계약 시기를 무기한으로 미룬 탓이다. 업체 대표는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

가 이뤄지면 연내 20만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3.3㎡당 7만~8만원대이던 인제지역 지가는 이달 2배 수준인 15만원대까지 올라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땅 값이 오름폭을 이뤘던 상황에서 남북관계까지 평화적으로 변화하자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 고자 하는 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가격대를 웃도는 거래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도,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조기건설 추진

판문점 선언 최우선 과제 선정
동해선 연결 확정 정부 협의 계획
예타 면제 필요 정부 공감대 형성
강릉~제진 3년내 연결 가능 전망

동해북부선이 남북관계의 시급성을 감안,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조기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문순 지사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중심이 돼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판문점 선언 최우선 이행과제로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연결을 확정,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이 포함되면서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병행되면 강릉~제진 구간은 3년 내 연결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했다.
또 경원선(백마고지~평강) 구간 연결과 국도 31호선(양구~금강)·춘천~철원 고속도로·구리~포천~철원~원산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한다. 속초~원산·나진·크루즈 항로 개설과 설악(양양)·원산(갈마)·백두(삼지연) 등 남북 주요관광지를 운항하는 항공 노선도 개설, 남북 땅길·바닷길·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내년 중 설치하기로 하고 의원 및 정부의 관련법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추진단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판문점 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등 민족공동체 형성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북측 인사와 교환했다는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지은



최문순 도지사는 29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중심이 돼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영

남북 '판문점 선언'... 경협 구체화 주목

“北 건설시장 개척 미리 준비해야”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전망
시장 포화 건설산업 돌파구이자
신성장 동력 확보·통일 주역 기회
체계적인 실태조사·사전학습 필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프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건설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는 물론 학계와 국회 모두 앞으로 있을 경협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관련기사 23편

29일 (건설경제신문)이 만난 각계 인사들은 '판문점 선언'이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국내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다가오는 남북 경제협력을 기회로 북한에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택·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과 국가발전엔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은 “건설업계로선 오랜만의 굿뉴스”라며 “당장 가시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지털인 초콜릿 원형 돌 '민족의 봄'을 개봉하고 있다. **황**

건설수요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남북 합의에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연결이 명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통일의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마련된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긍정적 시그널은 맞지만 아직 불확실한 게 많다”면

서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된 인프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북에 진출할 때 건축 기준, 토지 소유권, 법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무턱대고 갔다간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 인프라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남북 경협으로 우리나라가 겪은 개발시대의 부작용이 북한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내에서는 신중한 모습도 감지됐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북 사업의 조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북 사업을 국내 사업에 준하는 조건으로 할지,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이 남북 사이에 합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사의 한 부장은 “내부적으로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라며 “정부 주도 사업에는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자체적인 투자 사업은 앞으로 협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형·권해석기자 haeseok@



남북 평화의 시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과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 전담팀도 부활 조짐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틀이 다져졌다. 남북 경제협력의 밑그림은 오는 6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축으로 한다.

동해권 벨트는 금강산에서 원산·단천·청진·리선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서해안 벨트의 경우 수도원에서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에 걸쳐 제조업과 중공업 기반의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고,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과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을 테마로 한다.

3대 벨트의 콘셉트는 각각 다르지만,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다를 게 없다. 인프라가 바로 그것이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적

동해·서해안·DMZ '3대 벨트' 구상
자원·물류·관광 등 테마 다르지만
교통 인프라, 핵심이자 선결 요소

국토부, 조직개편·인력확충 준비
5차 국토종합계획에 경협 반영

편과 인력 확충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남북협력 채널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개설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시 건설교통부는 남북교통과를 신설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뒤에는 남북협력팀을 뒀고, 2012년에는 국제통상남북협력팀으로 개편하고 남북협력을 모색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남북 관계가 열여덟 부서로 얽히고 설킨 남북협력팀을 위한 전담 부서를 없애고 사실상 남북 인프라 구축 업무를 접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토부에 남북협력 담당 조직이 4년 만에 부활할 조



다가온 북녘... 발길 붐비는 임진각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29일 오후 파주 임진각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황**

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인력을 확보한 후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인력 확충과 함께 국토정책의 큰 그림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

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얼마 전 2040년을 향한 국토종합계획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감소, 환경·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통일 국토에 대한 방향을 더욱 크고 명확하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을 담당하기 위한 인력 정원을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내년까지만 해도 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한반도와 통일 부분을 더 크게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동해선·경의선 연결 ‘급물살’… 넓은 北 도로 현대화한다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들이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측과 철도로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프라 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해선·경의선을 시작으로 남북 간 끊긴 도로·철도를 다시 잇고, 북한의 노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단계적 군축 등 군사 분야 외에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협력 분야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경제의 키워드는 ‘10·4 선언’과 ‘동해선·경의선’이다.

2007년 10·4 선언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건설 등 북한 도로 철도 개·보수를 비롯해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 사업에 14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연구실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도로·철도 건설과 전력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선·경의선은 대북 인프라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0·4 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재개
남~북~러 가스관 연결도 관심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약 500km를, 동해선은 남측 제진에서 북측 금강산을 잇는 철도다. 경의선은 2003년, 동해선은 2004년 공사가 끝나 화물열차가 다녔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이후 남북 관계가 틀어져 10여년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동해선은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km) 구간이 끊겨 있다.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남북이

추진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과 연계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다 중단된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복원공사와 경기 파주에서 판문점 인근을 지나 개성으로 연결되는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도 최우선 사업으로 꼽힌다.

공항의 경우 참여정부 때 백두산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삼지연 공항 건설이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경수로 건설 등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자체 수립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집중해 북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등 중앙급 대규모 경제특구 5개와 중소규모 경제특구 20여개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통일부가 준비 중인 문 대통령의 경험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세부 로드맵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정상회담과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대북 인프라 사업들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다”며 “남북 간 격차 해소를 넘어 남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동 인프라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kth@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남북정상회담 만찬 참석 이유는

文, 'SOC 투자 중심' 경제협력 의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장. 만찬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여사,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만찬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창하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리 철도 연결...”이라는 설명과 함께 김 장관을 소개했다. 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 중 유일하게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한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가 1차 과제로 포함됐다.

당초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SOC(사회기반시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며 유엔 제재 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SOC 등 경제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가 판문점 선언에 전격적으로 담겼다.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은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단절된 남북을 잇고 교량국가로 공동 변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남측 구간과 북측의 라진~제진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중 하나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연결된 경의선은 노후화가 심한 만큼 현대화가 시급하다. 시속 40km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철도를 고속철 수준으로 개량하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철도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도로도 남북 간 연결과 함께 현대화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남기자 knp@